출구없는 '대화록 정국'…찾아도 못 찾아도 후폭풍

오늘 마지막 검색작업…존재 유무 결판
유실 확인땐 수사 통해 규명 나설 듯

여야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기 위한 3일째 재검색 작업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민주당 박남춘·전해철 의원 등 4명의 열람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여야가 2명씩 추천한 4명의 민간전문가를 대동하고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마지막날 대화록 재검색에 나섰다.

전날에도 여야 열람위원들은 국가기록원에서 5시간 가까이 대화록 재검색을 진행했으나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추가 재검색에 이어 22일에는 열람위원 전원이 국가기록원을 찾아 마지막 검색을 하고 대화록 유무를 최종 판단한 뒤 그 결과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만일 검색에서 여야가 대화록을 찾는다면 정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 확인 국면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2일까지 검색에서 찾지 못할 때에는 대화록 증발을 둘러싼 책임공방 등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단 대화록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명박정부에서 훼손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국가기관에 들어온 '특급비밀' 수준의 기록물이 내부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자 대화록 내용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우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음원과 녹취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국정원이 그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대화록 유실에 대한 책임공방이 불거지면 이명박정부에서 대화록을 손댔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일단 홍영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며 기록물 부실 관리 의혹을 제시했다.

또 정청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이 원본이며, 국가기록원 내 대화록 존재 여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문건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지 않았는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사를 통해 대화록 유실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여권에 먼저 제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특검을 제안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있을 경우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지원 구동을 통한 재검색에 시간이 상당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내세워 재검색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대 권력기관 고위직 10명중 4명 영남출신

152명 출신지 조사
호남출신 17.8% 검찰 92% SKY'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의 10명 중 4명은 영남 출신인 반면 호남 출신은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4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 152명의 출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TK) 35명(23.0%)과 부산·경남(PK) 27명(17.8%) 등 영남권 62명(40.8%) ▲수도권 32명(21.1%) ▲호남권 27명(17.8%) ▲충청권 21명(13.8%) ▲강원 등 기타 10명 순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50명 ▲경찰청 본청 국장급 이상 및 16개 광역시도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고위직 33명 ▲국세청 본청 국장급 이상 및 6개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36명 ▲감사원 감사위원 및 국장급 이상 고위직 33명 등 152명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다.

특히 국세청과 경찰의 경우, 영남권 출신이 고위직 절반을 차지해 특정지역 편중이 더욱 심각했다.

국세청 고위직 36명 중 ▲대구·경북 14명(38.9%)과 부산·경남 4명 등 영남권이 18명으로 50%를 기록했고, ▲수도권 7명(19.4%) ▲호남권 6명(16.7%) ▲충청권 5명(13.9%)으로 조사됐다.

경찰 고위직(33명)은 ▲대구·경북 6명과 부산·경남 9명 등 영남권이 15명으로 45.5%를 나타냈고 이어 ▲충청권 7명(21.2%) ▲호남권 5명(15.1%) ▲수도권 4명(12.1%) ▲강원 2명(6%) 순이었다.

검찰 고위직 50명의 출신지는 ▲대구·경북 10명과 부산·경남 9명 등 영남권 19명(38.0%) ▲수도권 15명(30.0%) ▲호남권 11명(22.0%) ▲충청권 3명 순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고위직 33명은 ▲대구·경북 5명과 부산·경남 5명 등 영남권 10명(30.3%) ▲수도권 6명(18.2%) ▲충청권 6명(18.2%) ▲호남권 5명(15.2%) 순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TK 정부' 답게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지속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152명의 출신대학은 ▲서울대 60명 ▲고려대 22명 ▲경찰대 11명 ▲연세대 10명 ▲동국대 8명 등으로 특정대학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검찰 고위직은 ▲서울대 35명(70.0%) ▲고려대 9명(18.0%) ▲연세대·성균관대 2명(4.0%) 등으로 이른바 'SKY' 출신이 46명(92.0%)에 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누리당, 임내현 의원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은 19일 대선불복 조장 발언과 '성희롱 발언'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김현숙 의원 등 30명의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에서 '성희롱 논란'과 관련, "임 의원이 여기자들 앞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을 했다"면서 "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임 의원이 지난 7일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부정하며 대선 불복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선거 원천 무효투쟁을 언급했다"면서 "이는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해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16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농담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전남도농업박물관 체험행사에 참가한 가족 관람객이 짚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전남도농업박물관 제공〉

짚공예품 만들고 봉숭아 물들이고

새단장 재개관 전남도농업박물관 여름방학 맞아 다채로운 체험행사

"무더운 여름, 전남도농업박물관에서 농업 체험하면서 신나게 놀아요."

개관 20주년을 맞아 최근 본관 전시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재개관한 전남도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이 여름방학을 맞아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체험학습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농업박물관은 36억원을 들여 현대식 전시기법으로 재정비해 국내 농업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게 했고 짚공예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지난 1993년 문을 연 농업박물관은 농경문화유물의 수집·보존·전시해 후손들에게 조상의 슬기로운 삶과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왔으나 전시시설의 낙후로 기능이 떨어져 지난해 5월부터 재정비에 나서 지난 16일 재개관했다.

재개관한 본관 전시실은 '영원한 인류의 생명창고 농업'이라는 주제로 농경역사실, 농경사계실, 공동체문화실로 구성,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하고 영상자료를 곳곳에 배치해 학생들의 교육적 이해도와 전시주제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꾸며졌다.

농업박물관은 재개관에 맞춰 짚공예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도 잇달아 마련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박물관 내 농경문화체험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짚공예 체험프로그램은 전통 짚공예품 제작 전문가의 시연과 교육 및 지도를 통해 볏짚과 보릿짚 등을 이용해 여치 집, 달걀꾸러미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완성품은 가져갈 수 있다.

또 오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여 일정으로 학생들은 물론 모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봉숭아물들이기 체험행사 프로그램도 마련되며, 오는 8월 24일에는 초등학생과 동반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대회도 펼쳐진다.

농업박물관내 야외전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을 펼치게 되며, 각 작품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등 7명의 입상자를 선정해 전남도지사상 등 시상한다. 문의 061-462-2796. /오광록기자 kroh@

진보정의당 당명 '정의당'으로
새대표 천호선 최고위원 선출

진보신당, 노동당으로 개명

진보정의당은 21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격인 '혁신당원대회'를 열어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고 새 대표로 천호선〈사진〉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사회민주당, 민들레당, 정의당 등 3개 후보작을 놓고 당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인 51.8%의 지지를 받은 '정의당'이 새 당명으로 결정됐다.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등 진보적 이념을 지향하는 3개 정당 가운데 당명에서 '진보'를 포기하기는 진보정의당이 처음이다.

대표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천 후보는 전체 투표권자 6535명 가운데 96.09%의 찬성표를 얻어 대표로 확정됐다.

천 신임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대변인·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3명을 선출한 부대표 경선에서는 이정미 최고위원(58.46%), 김명미 부산시당 부위원장(24.11%), 문정은 청년위원장(8.26%) 등이 당선됐다.

진보신당도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임시당대회를 열고 '노동당'을 새로운 당명으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당대회에는 노동당, 무지개사회당, 적록당, 평등노동당, 평등당, 평등사회당, 평화노동당, 해방당 등 8개 당명 후보를 놓고 선호투표를 시행한 결과 재석 대의원 252명 중 168명(66.7%)의 찬성표를 받은 '노동당'이 새 당명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이낙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증언대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국전쟁유족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 증언대회는 주요 지역의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들의 피해사례 증언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구·고발·입법 방향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한국사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 문제를 되짚어 보고 반전여론을 확산하는 한편, 평화협정 체결의 절박함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배기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민주당 배기운 의원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전문연구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전력수급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15년간의 전력수급 정책 기본방향과 장기 전망, 전력수요관리 대책, 적정 예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변경·수립하고 있다.

배 의원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추진실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결과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정책 실패의 반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540	1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208 311㎡	대	2,840,700 2,840,7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제한. [지분6분의1]
		동소 208 36㎡ 34㎡ 28㎡[현황:멸실됨] 부속건물 농업생산시설 30㎡[현황:멸실됨] 창고 27㎡[현황:멸실됨] 제시외 주택일부 4.2㎡	농가주택		
2013타경 656	1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61-16 628㎡	대	140,443,120 140,443,12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강진군 강진읍 서문길 36-10 99.92㎡ 부속건물 부속사 17.14㎡ 26.80㎡ 제시외 창고 11.7㎡	단독주택		
2013타경 809	1	장흥군 용산면 인암리 138 800㎡	대	14,390,300 14,390,3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공부상 주택68.7㎡는소재불명
		장흥군 용산면 척산길 6-6 80.3㎡ 68.7㎡[현황:소재불명] 제시외 창고 등 27.5㎡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564	1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산100 13289㎡	임야	7,308,950 7,308,950	연고미상의분묘수기가소재함
2013타경 687	1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209-4 1041㎡[대상물건및인접지상부근에연고미상의분묘수기가소재]	전	8,328,000 8,32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기타]					
2013타경 21	1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462-6 2987㎡	답	405,580,000 405,580,000	일괄매각, 목록1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장흥군 부산면 부산로 259 버섯재배사 388.5㎡ 388.5㎡ 388.5㎡ 저온저장고 166.5㎡ [위건물들의총면적은1332㎡이나현황은총1646.5㎡임] 관리사 70㎡[현황:35㎡]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2013타경 793	1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84-8 31㎡	답	38,475,000 38,475,000	일괄매각, 목록1, 3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록1,3,4 [현황:잡종지]
		동소 84-5 52㎡	잡종지		
		동소 80 227㎡	답		
		동소 산26-3 545㎡	임야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3. 8. 5.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8. 12.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7.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조영훈